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담당: 정록 집행위원장 (010-7724-1528),
한재각(010-2813-8706)
제 목 [보도자료] 923 기후정의행진 계획 및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23. 8. 30.
사진파일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4F6i_my17_PtaMEOT-Lhl8KmgxI39Zq?usp=s_haring

보도자료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 열린다 **“기후재난 안전보장” 등 대정부 5대 요구 등 발표** 8월 30일 1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열려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오는 9월 23일(토)에 서울 세종로에서 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 오송 지하도로 참사, 노동자의 폭염 사망 등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으로 현실되고 있지만, 자본과 권력의 현상유지만을 추구하고 있는 기업과 정부에 맞서기 위한 시민들의 대규모 행동이 다시 이루어진다.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은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노동자, 농민, 여성, 청(소)년, 홈리스, 성소수자 등의 수많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모여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칠 예정이다. 작년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바 있다.

14시부터 시작되는 본집회 이후, 15시부터 시작되는 행진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행진 대오는 기후위기에 핵발전 이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한다. 두번째 행진 대오는 공공교통 요금 인상, 해외 가스전 개발, 핵오염수 방류 등의 기후부정의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시청, SK본사, 일본대사관, 정부서울청사 앞을 경유하게 된다. 12시부터 시작되는 사전행사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설치하는 부스와 오픈마이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 동경에서 9월 18일에 열리는 기후행진 주최측과도 한일 기후운동 연대 메시지를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923 행진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하기 위해서 ‘포스터 행동’ 등의 사전 행동이 준비되고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를 참조).

조직위는 행진을 앞두고 5대 대정부 요구를 채택하였다. (1)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외에도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을 마련하라’,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등의 14개 세부 요구도 제시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를 참조).

오늘(8월 30일) 기자회견에서는 923 기후정의행진을 조직하는 이유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반빈곤, 탈핵, 철도 공공성, 새만금 신공항 반대 등의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다양한 단체/조직 활동가들이 왜 행진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발언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루어질 것이다(기자회견의 순서와 내용은 아래를 참조. 또한 주요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은 별첨 3, 4를 참조). 기자회견 이후 시내 곳곳에서 포스터를 부착하는 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끝>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록(923 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기후정의동맹)
- 발언 1: 왜 923 기후정의행진을 준비하고(기조) 어떻게 진행하는가 / 김은정(공동집행위원장/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 발언 2: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1) /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 3: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2) /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 / YWCA 활동가)
- 발언 4: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3) / 이재식(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발언 5: 나는 왜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는가(4) /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발언 6: 923 기후정의행진의 대정부 요구 / 황인철(기획팀장/녹색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조선희(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 위원장)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참가자 포스터 및 피켓 들고 사진 촬영

별첨 1.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별첨 2. 대정부 요구

별첨 3. 발언문 모음

별첨 4. 기자회견문

별첨 1. 기후정의행진 주요 계획

1. 923 기후정의행진(9월 23일 당일) 계획

- 사전행사: 12~14시, 세종대로(시청광장 인근)
- 본집회 : 14시~15시, 세종대로
- 행진 : 15~17시, 기후부정의 책임을 묻고 우리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진
 - 루트 1 : 세종대로~서울역~용산 대통령 집무실
 - 루트 2 : 세종대로~서울시청~SK본사~일본대사관~정부서울청사

2. 사전 공동행동

- 8/30(수), 923 기후정의행진 개최와 대정부 투쟁 요구 발표 기자회견
- 8/30(수), 923 포스터 홍보행동(부착). 이후 지역 부문별로 추가 행동 예정
- 9/1~9/20, 참가자 SNS 참가선언
 - “나 0000 의 참가선언 : _____ 을 넘는 우리,
923기후정의행진에서 만나요!” 내용의 인증샷을 SNS에 올려 자신의 참가를 알리고, 주변 참가 독려
- 9/3 ~ 9/16, 전국곳곳 사전공동행동
 - 지역 / 부문별, 기후정의 현안에 대한 거리 선전전/피켓팅, 공동행동 사업
- 9/18~9/22,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지역 / 부문별 릴레이 기자회견

3. 조직 및 국제연대

- 부문/지역 간담회
 - 가이드북을 기초로 지역 곳곳과 부문에서 923기후정의행진 참가 독려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집담회 및 기자간담회
 - 9/14(목) 지역과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단체 활동가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행진 참여의 의미를 나누며,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자리
- 국제연대
 - 923 계획 및 요구안 번역해서 외신 및 국제기후정의운동과 공유. 국외 연대메시지 요청(중국어, 일본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 베트남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 다국어 웹포스터 제작하여 홍보. 국내 거주 이주민/외국인 참여 홍보
 - 한일 기후(정의)운동의 9월 행동에 대한 상호 연대 메시지 교환

4. 홍보 및 언론

- 포스터 제작(2만 부 이상) 및 923 기후정의행진 가이드북(3만 5천부), 슬로건 및 요구안 스티커(3만 매) 인쇄 및 발송
- 정기 홍보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우리의 힘! 참여단체 이야기(카드뉴스) : 조직위 참여 단체 활동가 미니 인터뷰를 토대로 카드뉴스 주 3회 총 16회 발행 (8월 14일부터 시작)
 - 너의 힘을 보여줘! 923 기후정의행진 참가선언 (샷폼) : 923 추진위원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의 메시지를 샷폼의 형태로 주 1회 송출
 - 더 커지는 사회적 힘! 각계각층 923 연대 메세지(카드뉴스) : 923 추진위원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1장 카드뉴스 (8월 30일~)
 - 보이는 라디오(유튜브 송출) : 923 기후정의행진의 요구와 기획에 대해서 짧은 선전물에는 못담은 이야기들을 패널 초대를 통해 알리는 기획. 주 1회 총 2회 송출
- 우리동네 거점 공간
 - 전국 총 94개 거점 공간 모집 : 포스터, 가이드북, 스티커 배포 / 온라인 지도 배포
- 언론 기획 및 성명
 - 923 기후정의행진의 방향과 요구를 알리기 위한 언론보도기획
 - 녹색공공철도 기획기사(철도노조와 공동): 오마이뉴스, 8월 28일 이후부터
 - 주요 현안에 대한 성명 발표

5. 평가 및 후속 활동

- 923 행진 평가 토론회 : 10월 12일(목)
- 총선 대응 관련 토론회 : 11월 초

별첨 2. 대정부 요구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 923기후정의행진”

1. 방향 - 왜 923기후정의행진에 함께 하는가

1) 위기

기후재난의 현실이 참담하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를 통한 경고는 계속되지만,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며 가속화되는 재난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항상 무능하다. 산불과 산사태가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닥쳐올 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기구는 언제나 무책임할 따름이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앞에서, 안전한 주거환경,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점점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지난 1년여 남짓,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작은 성취마저 끝없이 무너뜨리는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에서 노동자 탄압, 공공요금 인상, 복지예산 축소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완화와 부자감세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이익을 살뜰히 챙기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대로 못살겠다”는 외침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허구적이고 비민주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내세우며,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핵산업 확대를 위한 구실일 뿐이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방관 등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핵기술이 기후위기의 만능 해결책이라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있다. 삼척석탄발전소는 지금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화석연료 산업은 폭리를 취하며 여전히 성장가도에 있다. 시민들 삶에 필수적인 에너지, 교통, 의료, 주거의 공공성은 서서히 잠식되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은 사라진지 오래다. 삶의 기본인 먹거리는 위태롭고, 농민과 농촌의 삶은 무너져간다. 신공항건설, 국립공원 케이블카, 4대강사업의 역행 등 국토 곳곳에서 생태계 파괴 사업들이 빗장 풀린채 질주하고 있다.

2) 위기를 넘어서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탄소중립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되어 왔고, 진정한 원인진단과 해결책은 외면되어 왔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자본주의 성장체제는 높고도 견고하다.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기후와 생태의 안녕 따위는 안중에 없이, 이윤과 성장만을 지고의 목표로 좇는 자본주의 체제가, 바로 이 위기의 원인이다. 생명보다 돈, 노동보다 자본, 환경보다 개발, 공존보다 경쟁, 인권보다 사유재산을

우선하는 체제가 이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다. 이 체제에 균열을 내고, 깨뜨리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길이다. 환경, 교통, 주거, 식량, 보건, 에너지 등 사회 각 부문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까닭이다.

또한 기후위기는 국제적인 불평등의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위기는, 북반구 국가가 남반구 국가의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착취해 온 오랜 식민주의 역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국제적 차원의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지 않고서 기후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북반구 국가와 부유한 사람들은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책임을 지고, 남반구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생태 부채’를 갚아야 한다. 국제적인 ‘기후악당’으로 불리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감축, 해외 화석연료 개발과 투자 중단, 남반구 국가를 위한 ‘손실과 피해’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길이다.

2023년 지금, 이 체제에 맞서는 행동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기후재난으로 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을 위한 전환,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삶과 권리가 존중받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가용이 아니라, 모두의 이동권을 위한 공공교통이다. 그 중심에 철도가 있기에, 민영화가 아닌 공공성 강화가 답이 되어야 한다.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 등 정치적 이익과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를 멈추어야 한다.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대한 체제에 균열을 만들어 가자.

3)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

위기를 넘는 전환은 몇몇 사람, 몇몇 단체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 힘을 키워왔다. 지난 4년간,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더욱 커지고 깊어졌다. 2019년 9월 6천여 명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2년 9월 3만여 명으로 커졌다. 2023년 4월엔 평일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정부청사를 에워쌌다. 참가자 수가 커진 것만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도 진전되고 깊어졌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넘어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 특히 지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치면서, 기후정의를 향한 목소리는 강고한 기존 정치의 벽을 뚫지 못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기후위기 해결을 지체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한 사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인 정치의 장에서,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은 배제되었다.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배척당한 이들, 평범한 이들이 '힘'을 되찾아야 한다. 이 힘은 착취하고, 망가뜨리는 힘이 아니다. 공동의 삶의 기반을 건설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희망하고 체제를 전환하는 힘이다. 기후위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연대의 힘, 그 힘을 고양하는 현장이 923기후정의행진이다. 기후위기를 일으킨 이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되찾는 발걸음이, 바로 923기후정의행진이다.

2. 923 기후정의행진은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5대 요구안

-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부 요구안

-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 6) 지역사회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 13) 군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별첨 3. 발언문

이재임(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이재임입니다. 빈곤사회연대는 도시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이들과 연대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고급스러워 질 때마다 자리를 빼앗겼던 노점상들, 재개발로 마을을 부수고 비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갈 곳을 잃은 가난한 주민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두세시간 통근시간을 감내해야하는 도시의 노동자, 공공장소에서 눈 좀 불이려하면 득달같이 쫓겨나는 거리 홈리스들, 이들이 겪는 고통들은 도시가 살기 좋아지려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진통이란 이름 아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지구 하나쯤 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윤만을 위한 도시 개발, 내 집 갖기 경쟁이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재앙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 주거권은 없어서는 안될 권리이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쉽게 하찮은 것이 되고 맙니다.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폭풍 쪼던 올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 집을 구할 때, 주택시장의 95퍼센트가 민간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단 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는 매일 공사중인데, 기후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윤만을 위한 개발이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을 파괴하고, 지구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 쪽방촌, 반지하처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는 정치권의 봉사활동 참 많이도 옵니다. 복날에는 생수와 레토르트 삼계탕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이런 도움을 청하는게 아닙니다. 오직 이윤만을 위해 땅과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온 그 자체가 빈곤과 기후정의를 만들어 냈으니, 그 폭력의 굴레를 멈추라고 말 할 것입니다.
- 빈곤사회연대는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을 꾸려 923기후정의행진에 참가합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한국사회에 공공임대주택이 훨씬 많아져야 하고, 7년 거주 기한, 10년 거주 기한 걱정 없이 살며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느것도 착취하지 않은 집에 살며,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꾸리자고, 오래살자 공공임대 행진단은 외칠 예정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후정의를, 또 빈곤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유에스더(탈핵시민행동 활동가/YWCA)

- 탈핵시민행동과 함께하는 YWCA 활동가 유에스더입니다. 우리 단체에는 별개의 청소년 조직인 ‘Y-틴’이 있습니다. 이번에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에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는 운동주제를 잡았습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식은 기후위기를 진짜 위기가 아닌, 핵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몸으로 공청회장을 막아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40년 수명만료한 고리2호기부터 원전 수명 10년씩 무리하게 연장하고, 영구 처분 방법도 없는 핵폐기물은 원전지역에 폐기장을 더 지어서 해결하겠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밀집도 1위 국가인데, 심지어는 이 좁은 땅에 신규 원전건설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핵발전 확대정책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그들이 아니라, 우리 시민입니다. 월성 원전 인근 지역 어린이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나왔고, 특별히 지역여성의 갑상선암 발병률은 2.5배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년 째 이주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가는 핵발전소와 주민 피폭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원전의 위험성과, 지난하고 끔찍한 피해를 목도했습니다. 폭우, 폭염, 산불이 더 많아질 이 기후재난 시대에 핵발전소는 더 위험기만 한데, 핵발전소 늘리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위협일 뿐입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동조 역시 국민의 85%가 반대해도, 200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도, 매주 광장에 모여서 외쳐도, 지금껏 모든 핵산업이 그래왔듯 그 외침을 묵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 현 정부의 유일한 기후정책인 핵발전은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착취적 구조와 부정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23년, 온 국토와 해양생태계 그리고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핵폭주의 결과를 당면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핑계대며, 안전을 위협하는 핵카르텔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2시, 7년을 이어온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핵폐기물을 현재세대와 다음세대에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있는 기후위기대응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핵폭주 막아내고 기후정의로 갑시다. 탈핵!

이재식(전국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기후정의는 곧 공공철도, 공공철도는 곧 기후정의다.

- 2023년 여름.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오늘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인사드립니다.
- 철도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대안 교통망입니다. 여타 교통수단보다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통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철도는 청년층과 노년층, 여성과 노동자 등 승용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망의 뼈대를 이룹니다. 모든 시민과 계층이 평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데도 철도는 필수라는 뜻입니다.

- 철도노동자들은 철도 이용율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철도가 곧 기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비효율적인 고속철도 분할 체제를 통합 체제로 되돌리고, 무궁화호 등 비수도권 열차의 운행에 수익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철도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열차 운영과 철도 시설 유지보수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일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 행동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철도를 지키며 기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3만 철도노동자들을 한 목소리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유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기후 재난을 막기 위한 생태계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다.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는 자연적인 탄소 포집 기능과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로 빈도 높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막는 최후의 자연계 보루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촉직하는 정부의 생태보전 학살 정책과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 정책이 자연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위기를 확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 재난의 완충지로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결의하며,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 확장, 파괴된 생태계의 30% 이상 복원과 유해보조금 철폐를 목표로 내걸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 발맞춰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의 유해수산물보조금 철폐 결의를 수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유해수산물보조금 철폐 결의를 차례로 수용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수용하지 않는 나라로 비추고 있다.
- 국제사회의 생태계 보전 참여와 달리 한국 정부는 생태계 학살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립공원이 가진 초록의 상징성을 배제하기 위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지리산에 산악열차 건설을 허가했다. 국립공원이 무너지면 전국의 산림이 국민의 세금으로 소수의 배를 불릴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그 피해는 산의 생태계와 그 생태계 속 동물과 식물이 고스란히 받게 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인간에게까지 피해가 닿게 될 것이다. 여야는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는 특별법을 난립시키며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이양하고 산림 개발의 권한을 검증없이 지자체장에게 이양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화학 물질 안전 규정을 킬러규제로 지칭하고 적극 행정이라는 명목으로 환경보정 정책을 후퇴시켰다. 정부의 무자비한 생태 학살은 끊임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2년 반의 숙의 숙에 만든 국가물관리계획의 자연성 회복을 단 며칠만에 배제하는 변경안을 내놓았다.
- 생태계는 기후위기를 늦추고 기후 재난을 막는 최후의 자연 보루다. 생태계 학살을 당장 멈춰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인간 간섭을 배제한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생태계를 보전하라!

별첨 4. 기자회견문

위기를 넘는 우리의 힘!으로, 기후정의 실현하자!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자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더이상 해외 다른 나라의 안타까운 소식만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하고 또 전해들은 소식을 통해, 기후위기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처럼, 기후재난 속에서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의지와 능력도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기업의 이윤과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움켜쥐는데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을 뿐입니다.

9월 23일, 서울에서 기후정의행진이 다시 열린다. 작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우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가속화하는 현 체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위기를 넘는 우리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더 크게 모여 싸울 예정입니다. 기후재난 속에서 돈벌이와 권력을 탐하는데 빠져 우리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지금,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생존과 삶,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중요한 수많은 위기와 폭력을 맞서며 현장에서 싸워 온 이들이며, 불안과 무기력을 이겨내고 절실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연대해온 이들입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의 책임을 묻고, 핵발전, 석탄발전, 신공항, 국립공원 개발사업에 맞서,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며, 공공 재생에너지와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모이는 이들입니다. 전국 350여 개의 단체들이 참여하여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수백명의 시민들도 추진위원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923 기후정의행진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역과 현장 곳곳에서 기후위기를 알리고 기후부정의에 맞서는 사회운동이 하나씩 모여 큰 물줄기를 만드는,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꽃피우는 순간입니다. 이후 곳곳에서 체제전환을 향한 강력한 열망, 저항과 대안을 맺고 나누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내년 총선 역시도 기후정의행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기후정의의 정치를 뿌리내리고 싹트우는 기름진 토양이 될 것입니다.

동료 시민들에게 호소합니다! 923년 기후정의행진에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대한 사회적 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의 손을 잡고 이 행진에 함께 합시다. 기후위기 앞에 선 많은 이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내어, 기후악당들의 본거지를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너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칩시다. 9월 23일, 서울 세종로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2023년 8월 30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